

종합

지방선거 끝나니...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공공요금에 줄줄이 오르는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조짐이다.

이들 요금은 소비를 줄이는 게 쉽지 않은 데다, 경기가 여전히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서민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1일부터 전남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을 8.6~12.7% 인상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의 경우 1000원에서 10%(100원) 오른 1100원으로, 좌석버스는 현행 1200원~1500원에서 1300원~1650원으로 인상을 했다.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 통합시는 1500원에서 1650원으로, 비통합시인 목포시는 1450원에서 1500원, 군 지역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을 했다.

또 중·고등학교 일반버스 요금도 700원에서 800원으로, 초등학교는 45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다.

전남, 시·군 버스요금 이어 관람료 등 줄줄이 올라

광주, 울초 동결 방침 불구 전기·가스 등 인상 대기

관람료 등도 인상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해양수산과학관의 재정운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성인 관람료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 요금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장흥군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10월 이후 '장흥군 하수도조례'를 개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도 올 초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시키기로 했으나 지속적인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은 100원(17.9%), 상수도 요금은 7% 등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이후 동결됐던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외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희망하고 있으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경제 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경기 뿐만 아니라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지단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전남도는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판매량이 18% 증가(2009년 3억 6000만㎥→2010년 4억 2000만㎥)할 것으로 예상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당 평균 2~3원을 인하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시설

금남지하상가 '人災사고' 방치만 할 건가

지난 5월 지반 붕괴사고를 당한 광주 금남지하상가가 이번에는 하수관이 터지면서 물바다가 돼 입주 상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났으나 관계기관에선 이렇다할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금남지하상가의 침수피해는 지난달 30일 밤과 1일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수관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여 가량의 빗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돼 차량 20여대가 고립되고 지하상가 일대의 에어컨 작동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붕괴사고 이후로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침수로 인해 에어컨까지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심각하다"며 "비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가 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상인들은 서석로 폐쇄에다 붕괴사고까지 겹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 역시 시내버스 노선 변경과 함께 차선이 좁아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데도 시공사인 D건설과 광주시청은 '정밀안전진단'을 이유로 보수공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에 따른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문제의 하수관은 지반 붕괴 직후 땀집식으로 설치된 데다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지름 1m의 크기로는 수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예견돼 있었다.

시공사와 관계 당국은 정밀안전진단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책임 소재 역시 철저히 따져야 한다. 아울러 상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목포~부산 간 열차 운행 중단 재고돼야

목포~부산 간 열차 운행이 오는 5일부터 중단된다고 한다. 코레일이 승객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목포역~부산 부전역 구간의 열차 운행을 축소 조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목포에서 부산으로 바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는 순천~부산 구간으로, 목포~순천 축소목 목포에서 부산이나 전남 동부권으로 가려면 광주 송정역에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는 목포~부산 간 열차 운행 중단을 재고할 것을 코레일에 강력히 촉구한다. 목포~부산 간 열차 운행은 영·호남의 대표도시를 잇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똑같은 이유로 지난 2000년 목포~부산 간 비행기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열차마저 사라진다면 동서 간의 교류통로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 논리에 앞서 지역화

합과 미래를 내다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역 주민의 불편도 생각해야 한다. 철도는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이다. 그런데도 코레일이 지역민과의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또한, 승객 감소를 운행 중단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동안 이용률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묻고 싶다. 경영 개선을 하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목포 지역민의 불편을 담보로 운행 중단을 결정한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코레일은 눈 앞의 수익만 따질 게 아니라 주민 편의라는 실용성과 동서화합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목포~부산 간 열차 운행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금호타이어 노노 충돌하나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원들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보궐 선거를 강행하면서 금호타이어에 일촉즉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호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일 "지난 5월 26일 금호타이어 노조 제3기 집행부 탄핵 찬반투표를 실시해 80.7%의 찬성으로 현 집행부가 탄핵됐다"며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보궐선거를 오는 5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에는 민주노동자회 소속 김봉갑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투표는 광주공

장의 경우 5일 오전 5시30분부터 11시까지 별관 앞에서, 곡성과 광덕공장은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정문 앞과 노조 휴게실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현 집행부와 회사 측은 "이번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 내에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회사측 관계자는 "지난달 법원에서 현 노조 집행부 탄핵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일부 강경파 노조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는 불법으로 사내 투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노조 집행부도 "물리적으로 선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며 "다음 주 대의원대회를 열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여수 개도 등 4곳 '친환경 명품섬' 개발 된다

여수시 개도를 비롯한 4개 섬이 '친환경 명품섬'으로 지정돼 관광지 개발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여수시 개도(8.76km)를 중심으로 인근 송여지도(0.17km)·적금도(0.78km)·둔병도(0.62km)까지 개도권역으로 포함해 '친환경 명품

섬'으로 지정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개도의 경우 특산물인 '개도 막걸리'를 활용해 막걸리 생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술 체험 공간을 마련해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원들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보궐 선거를 강행하면서 금호타이어에 일촉즉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호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일 "지난 5월 26일 금호타이어 노조 제3기 집행부 탄핵 찬반투표를 실시해 80.7%의 찬성으로 현 집행부가 탄핵됐다"며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보궐선거를 오는 5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에는 민주노동자회 소속 김봉갑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투표는 광주공



2일 오후 광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과 만남의 날' 행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姜시장 직원 첫 대면 “뚝바로 앉아라” 군기잡기

금남지하상가 침수 관련 '책상머리 대책' 질타 서구청 찾아가 “뇌물 사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강운태 광주시장이 2일 취임 이후 시청 직원들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일부 공무원의 태도 불량과 업무 소홀을 강도 높게 지적해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다. 특히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채 업무를 처리하는 '책상머리 대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강 시장은 2일 오전 9시20분 광주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가진 7월 정례회에서 발언 도중 앞줄에서 다섯 번째 앉은 공무원을 직접 지목하며 "자세가 안 좋다. (당신은) 얘기하려면 하고 말하면 마라는 자세로 삐딱하게 뒤로 젖혀서 앉아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일부 공무원들이 웃음을 터트리자, 강 시장은 정색하고 "지금 웃을 일이 아니다. 펜이 있으면 메모를 하는 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다. 펜이 없으면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그렇죠"라고 답변을 유도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대답소리가 작자, 강 시

장은 재차 "그렇죠"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공무원들은 우렁차게 "네"라고 답했다. 모든 공무원이 바짝 긴장했음은 물론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강 시장 자신도 15년 만에 광주시장으로 돌아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첫 대면하는 자리에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지적한 것"이라며 "참여와 소통, 시민 행복 등 민선 5기가 지향하는 바를 공직자들이 공유해주시기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책상머리 대책'을 질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금남지하상가를 들었다. 강 시장은 "2주 전 관계공무원에게 금남지하상가 위기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는데, 어제 금남지하상가가 침수됐다"며 "관계 공무원은 건설회사가 하수구에 모래를 쌓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던

데,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민원이고 나발이고 현장에 나가지도 않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을 받드는 부지런한 공무원상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인사와 관련해 "일명직 시장 때 국회의원 인사부탁을 하기에 '최송한데오, 시장의 인사권은 지휘권이다.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 지휘권이 성립하겠느냐'며 양해를 구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외부사람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사람은 안 봐주겠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정례회를 마친 강 시장은 곧바로 구청장 공백사태를 맞고 있는 서구청을 찾아 인사배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여수선한 서구청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종 재판이 남아 있지만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검찰에 기소당하고 구속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이미 반성을 했으리라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당권경쟁 본격 레이스

10일 호남·제주권 정권발표회

한나라당이 2일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첫 합동 정권발표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4일 후보등록에 이어 5일부터 열흘간 전국 5개 권역별로 대의원을 상대로 한 비전발표회, TV토론 등을 벌여 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5명(여성 1명)을 선출한다. 광주와 전남·전북·제주권 정책비전발표회는 오는 10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대 출마자들은 이날 현재까지 친이(친이명박)계의 안상수 홍준표 정두언 정미경 의원과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친박(친박근혜)계의 서병수 이성현 주성영 한선교 이해훈 의원, 중립계의 남경필 김성식 조전혁 의원 등 13명이다. 그러나 친이 성향 중립파인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14명의 후보들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권발표회에서 친이계 정두언 의원은 세대교체와 보수혁신을 내세우며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고, 김대식 전 사무처장은 "호남대표인 김대식을 선출적으로 뽑아주느냐가 한나라당 변화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민주, 태백 보선 후보에 연극인 최종원씨 영입

민주당은 2일 연극인 최종원(60)씨를 영입했다.



강원도 태백 출신인 최씨는 고교 졸업 후 합태관광에서 일했으며, 이공계 강원지사의 의원직 사퇴로 오는 28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태백·영월·평창·정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씨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2004년 총선 전 열린우리당 문화예술특위 위원장으로 영입돼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사황을 걸었는데... 신세 참...

“추가 공사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정세균 국회 '4대강 검증특위' 구성 제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추가적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또 경북 영일·포항 출신 사회 지도층 향우회인 영포회 인사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을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포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위를 통해 4대강 공사의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사업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실시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수 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각계 의견을 총

분히 수렴, 강을 살리고 생명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7월까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데 대해 "6·2 지방선거에서 이미 국민적 요구가 확인됐으며 사업의 타당성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수질 개선 효과, 수량 확보 근거, 홍수관리 적정성의 재검토 ▲보 건설·준설 등 대운하 의심 사업의 전면 재검토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 중심의 '진짜 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또한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영포게이트는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독재자들의 수법이며 과거 한회가 확대된 모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영포회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